

다문화 무용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구

전 은 진*

목 차

Abstract	IV. 다문화 무용교육
I. 서론	V. 결론
II.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참고문헌
III. 다문화 교육정책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and task of multicultural dance education

Jun, Eun-jin · Kookmin University

As of January, 2013,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Seoul is 1,445,631 persons, taking 2.8% of the entire population. In the course of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whil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leading policy supports, doubts about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policy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The recent criticisms and renunciation on multicultural policies in Europe suggest meaningful issues for Koreans having high pride as a homogeneous race.

Breaking away from the assimilationism, a new policy model should be established to form a pluralistic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aims to find alternatives from the dance education that enables non-verbal communications. Unlike exis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s and traditional cultural educations that have been recognizing the multiculturalism as a specific social class or subject to be managed, the dance education has advantages of inducing mutual respects and communications without discriminating between the main and non-main streams.

*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논문투고일: 2014. 01. 20. 심사일: 2014. 02. 10. 게재확정일: 2014. 03. 01.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ways to have the dance education adapted into the multicultural policy currently implemented by public institutions. Also, this is intended to propose a new educational direction pursuing interactive cultural exchanges while maintaining each individual's identity. And this is also the vision of dance education to be pursued not only for any multicultural society, but for a human society.

key words: cultural diversity, assimilationism, multiculturalism, dance education

주요어: 문화 다양성,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무용교육

I . 서론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05년 10월에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 다양성 협약’이 이루어졌다. 문화적 재화의 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제33차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찬성 148개국, 기권 4개국(호주,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반대 2개국(미국, 이스라엘)이 자국의 의지를 표명하였다¹⁾. 같은 해 7월 영국 런던, 10월 프랑스 전역, 12월 호주 시드니에서 인종 간 소외와 갈등이 나타났다. 폭력, 약탈, 방화로 인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경험한 유럽은 소수집단에 대한 불신과 차별을 인정하고 기존의 문화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일부는 국가 정체성의 약화, 사회 분열에 대한 우려 가운데 ‘다문화주의 정책’을 수용하였고, 일부는 자유주의 이념 하에 방임해온 소수집단의 사회편입을 목적으로 ‘동화주의 정책’을 강화하였다. 한국은 2012년 인구학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이를 위한 시민 의식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성립 초기부터 다양한 문화 공존을 경험해 온 유럽, 북미 등의 정책 동향에 집중하고 있었으나 독일(A. Merkel, 2012. 10), 영국(D. Cameron, 2011. 2), 프랑스(N. Sarkozy, 2011. 2), 유럽회의(T. Jagland)에서 차례로 다문화주의 실패와 포기를 선언하면서²⁾ 정책적 선례를 찾기 힘들어졌다. 다행히 우리사회는 자국민의 우월한 민족의식 이면에 유연한 문화 수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2년 5월 15일). “문화다양성 협약과 유네스코”.

http://www.unesco.or.kr/news_center/sub_01_view.asp?articleid=2500

2) 연합뉴스(2011년 2월 8일). “곤경에 처한 영국의 다문화 정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00415>

용의 중요성과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개성과 표현, 소통을 중시하는 예술교육의 방법론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현장의 요구에 비해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그 주제와 내용이 다소 유사한 문제가 확인된다.

나경아, 박현정, 오유진(2011)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무용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는데 연구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교육환경에 해당하는 부모, 기관담당자의 요구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들은 성장기 연령에 맞는 신체활동과 정서표출, 문화이해에 도움이 되는 학습내용을 선호하고 있었다. 고경희(2011)는 “다문화적 상호 이해를 위한 무용교육의 방향 모색”에서 한국무용 외에도 다른 나라의 무용을 함께 교육해야 하며, 감성을 자극하는 공감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중 언어와 풍부한 문화 경험은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화를 위한 다원론적 관점에서 무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비해 김현남(2012)은 민속무용 레퍼토리를 나열하는 교과과정은 각 문화의 전통성과 특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여러 문화를 관통하는 보편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무용의 요소와 사회적 기능을 축으로 다양한 무용형태를 비교해보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낯선 문화의 일방적인 수용은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방해하므로, 교육과정을 유연화 하고 창의적·인문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개개의 문화를 동등한 위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안병주과 원은정의 연구(2009)는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무용교육이 필요하며, 민족에 대한 이해와 자국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실천 과제 제시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전통, 관습, 역사, 문화만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사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윤영(2010)은 무용교육이 다양한 문화와 민족, 역사,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정체성 함양,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 사회성 신장, 학교생활 적응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무용교사의 인식 변화와 소통 등을 실천 과제로 제안하였다.

그 외의 다문화 무용교육 연구는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교육 효과는 심리사회적 적응(김인숙과 이경희, 2011), 문화적응(전은자와 김현정, 2010), 문화정체성 형성(나경아, 오유진, 박현정, 2012; 정은영과 최현주, 2010), 사회성 형성(손재현, 김한아, 이성노, 2012; 양주연과 이강순, 2010)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민속무용(이정연, 2008)을 포함한 다문화 체험(정희자, 2009)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 상당수의 선진국이 다문화 사회로 자리 매김한 가운데, 우리는 기존 사례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교육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개 속도를 고려했을 때 현실에 적합한 이론과 모형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를 향한 국가별 이념을 고찰하고, 한국의 이주민 수용 실태와 다문화 교육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교육 사례를 분석하고, 그 발전 방안을 탐색하여 무용교육 분야에 적용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국공립 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정책 연구와 세미나, 포럼 등의 발표 자료를 수집하여 재분류 하였다. 연구과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2주 1회, 총 5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행하였다. 통계를 활용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사례의 질적 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다문화 무용교육의 전망 탐구에 목적이 있다.

II .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자연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문화 다양성도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초기의 문화 다양성은 문화 정체성의 개념에 가까웠다. 종전 이후 등장한 독립 국가의 존립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문화 다양성은 문화 민주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형성된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었다. 최근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과 ‘문화 다양성 협약’에는, 수적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문화상품의 시장 독점을 지양하는 문화산업의 보호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Castles와 Miller(1998:249-252)에 의하면 다문화 사회 통합정책은 동화주의모형assimilationism model,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 model,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ism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화주의’는 모국의 고유문화를 탈피해 이민국에 적응할 것을 강조하는 정책모형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시민·영주권을 부여하고, 주류 집단에 신속히 적응하도록 유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인 동화주의에 피해를 입고 있다. ‘차별배제’란 소수인종 혹은 집단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갈등을 회피하는 정책이다. 특정 이민자에 대해서는 자국민과 동일하거나 공식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반면, 그 외에는 이를 부인하는 이중적인 접근을 취한다. 차별배제는 우리의 3D 노동시장에서 자

주 발생한다. 부족한 노동력을 충족한 이후, 이주민을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방식이다. ‘다문화주의’란 국가 내부에 복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긍정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상이다. 이 경우 공동체의 정체성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강한 측면이 있어, 개별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권경희, 2012:87-88). 이는 1960년대 문화운동의 성격을 버리고 공동체의 정체성에 집중하기 시작한 커뮤니티 아트가 현대사회에 재조명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원주의pluralism는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가치관, 이념, 목표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다문화주의와 유사하다. 정치학적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사상, 언론, 집회, 결사 등의 자유를 허용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소수 집단의 규모와 영향력이 팽창할 경우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게 되어, 이념의 논리적 근거와는 별개로 현실적인 정책모형이 되기 어렵다. 이와 달리 공화주의republicanism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강조한다. 공공선에 대한 헌신을 전제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념이며 프랑스 등의 공화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하나의 범주 안에 다른 인종, 민족, 계급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2013년 1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44만 5631명으로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였다³⁾. 이는 2010년 미국의 합법적 거주 외국인(4.3%)에 비하면 낮고, 세계 인구 대비 이주민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Troper(1999:997-1006)에 따르면 다문화 사회는 ①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②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려는 사회이념 ③ 인종,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초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08년 최초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다문화 가족이란 사회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국적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가족, 정책적으로는 결혼 이민자와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의미한다. 2011년의 개정으로 일반 귀화자 가구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었다. 2013년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28만 명, 그들의 배우자는 28만 명, 자녀는 19만 명이며, 총 75만 명의 다문화 가족이 구성되어 있다⁴⁾. 그러나 201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외국인과의 혼인·이

3) 안전행정부(2013년 7월 3일). “외국인주민수 144만 5천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2.8%”.

http://www.iom-mrtc.org/trend/trend03.php?admin_mode=read&no=14148

4) 여성가족부(2013년 7월 5일).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http://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5a.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1668

혼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혼인이 지속적으로 감소(2007년 10.9%→2012년 8.7%) 하는데 반해 이혼은 다소 증가(2007년 6.7%→2012년 9.5%)하는 추세이다⁵⁾.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폭행, 사기, 무능력, 중독 등으로 다양하다. 별거 등의 사실상 이혼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문화 가족 15,341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존의 다문화 정책으로 이민자의 초기 적응에 진전이 있고 고용 확대와 빈곤완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결혼초기(5년 미만)의 가족해체 비율이 감소하였으며(2009년 51.3%→2012년 17.7%), 특히 학대와 폭력에 의한 이혼·별거가 감소(2009년 12.9%→2012년 5.1%)한 것이 고무적이다. 또한 결혼 이민자·귀화자 중 71.4%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고, 46.2%가 한 가지 이상의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⁶⁾. 그러나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군 단위의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90% 이상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정책 서비스 참가율이 30% 안팎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결혼이민자의 고용확대와 함께 사회적 차별 경험자의 비율도 4.9% 증가하였고, 지역주민 모임에 참여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도 14.5% 약화되었다⁷⁾.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교생 36%, 중학생 51%, 고등학교생 69%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예산정책실). 평균 43.8%로 심층 인터뷰에서 개인적 특성(국적 등)에 따른 교육지원 부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 가정 자녀 중 36.5%는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업을 중단한 이유 중 23.8%는 친구·선생님과 관계 악화였다⁸⁾. 한편 전국 100개 중·고교 재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자격요건으로 '한국 국민임을 느끼는 것'을 선택한 응답자가 89.2%였다.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는 '혈통 중시'가 88.6%를 차지하였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에서 실시한 '국민정체성 국제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36개국 중 필리핀,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혈통을 중시하고 있다⁹⁾.

5) 통계청(2013년 4월 23일). "혼인·이혼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86676

6) 여성가족부(2013년 4월 23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9_02.jsp?func=view&idx=691581

7) 국민일보(2012년 9월 19일). "다문화가족정책, 이민자 사회통합 한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456516&cp=nv>

8) 한겨레신문(2012년 8월 15일). "다문화가정 자녀 10명중 4명은 학업중도포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47325.html>

9) 중앙일보(2013년 1월 15일). "여성가족부_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일반인보다 높아".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420471&ctg=1200

권경희(2012:114)의 주장처럼 우리는 단일혈통에 대한 자부심에 비해 거의 모든 정당이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에도 인종·문화·종교적 갈등이 발생한 바 없다. 물론 다문화 가족의 수가 사회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며, 결혼이주여성, 그들의 자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되는 경제난, 외국인 노동자 차별, 이민 2·3세대의 진출에 따른 사회갈등의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교육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III. 다문화 교육정책

대개의 국가들은 다문화 사회 형성 초기에 통합과 동화를 추구하다가, 급속한 노동력 유입을 계기로 다문화주의를 강조하고, 이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다시 동화주의로 회귀하는 진자 운동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서유럽과 호주를 중심으로 동화주의적 시각을 보다 강조하는 정책이 부상 중이다(박성혁, 곽한영, 2009:118).

프랑스는 오랫동안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하나의 가치에 용해시키기 위한 포섭정책으로 동화주의 전략을 구사해 왔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1조에 의하면 ‘프랑스는 분리되어 질 수 없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인 공화국’이다. 이러한 통합정신에 따라 언어교육과 사회정책 시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여 공화국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문화적 동질성과 단일성이 사회규범으로 간주되었고 문화적 다양성은 배제되었다(Martiniello, 1997:21-42).

일본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공생”을 추구한다. 단, 시민단체와 지자체에 비해 중앙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전 이후에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는 국제 이해교육을 실시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한 이후에는 귀국자녀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영어교육과 이문화 접근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소수 민족과의 교류는 범주에 넣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다. 조만간 일본인 자녀가 아닌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가 부상할 것으로 여겨진다(박성혁, 곽한영, 2009:110-113).

영국의 집권 노동당과 인종평등위원회는 이슬람 등의 소수민족을 방임해 온 기존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통합 정책으로서, 이주민 공동체가 영국의 전통과 규범을 학습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 제시할 계획이다(박재영, 2008:114).

호주는 이민과 유학을 개방하고 다문화주의에 기반 한 사회통합을 실천해 왔으나, 최근 인종간의 갈등과 폭력, 외국인 혐오주의 등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팽배한 상황이다(박성혁, 곽한영, 2009:104-105). John Howard 전 총리는 ‘이민 다문화부’를 ‘이민 시민권부’로 개명하고, 담당 장관을 교체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으나, 2013년 Tony Abbott 총리의 재임 이후 기존의 문화정책으로 복귀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다문화 교육정책 방향은 1960년을 전후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전에는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포기하고 단일한 성격의 문화에 편입되기를 강요하는 동화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인종차별에 대한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면서 다원주의를 수용하여 캐나다, 호주와는 또 다른 방식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천한다. 특히 소수인종과 차별, 평등, 민주주의, 인권에 관련한 담론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설동훈, 2006:264).

네덜란드는 관용주의, 실용주의, 해양상업주의 등과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이민자뿐만 아니라 자국 내 소수집단, 예를 들어 동성애, 안락사, 낙태, 마약문제 등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진보·자유주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캐나다와 함께 다문화 사회 형성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지원 방향을 다소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 서유럽이 추구하는 동화와 순응이 아닌 문화 상호교류를 통한 능동적·포괄적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받아들이는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장봉익, 2012:151-152).

한국의 ‘다문화정책추진방향’은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사회의 창조력 증대와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¹⁰⁾. 구체적으로 2006년 전국 21개소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2010년에는 중앙 8개 부처에서 30여개의 다문화 지원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소수문화의 공존과 이주민·내국인 간의 소통을 위한 교육지원에 집중하고 있다¹¹⁾.

10) 여성가족부(2012년 6월 4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2년도 시행계획)”.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2a.jsp?func=view¤tPage=3&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42664

11) 동아일보(2011년 2월 8일). “문제는 시스템이다”.
<http://news.donga.com/rel/3/all/20110208/34642787/1>

표 1. 중앙 8개 부처의 다문화 지원사업

기관	지원내용
교육부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지원, 교육청과 연계 초, 중, 고 공교육에서의 다문화 거점 학교 및 전담교사 지정 등
고용노동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지자체와 연계(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으로 취업 등록 및 구직알선
농림축산식품부	결혼이민자 영농기술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재 개발과 보급, 문화교류 프로그램 지원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 사회보장 지원
법무부	결혼이민자 입국, 체류, 귀화, 허가지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어 및 다문화 사회 이해 제고 교육시행
외교부	결혼이주자 주요 송출국가와의 외교관계 지원
안전행정부	결혼이민자 생활정착 지원, 지자체 지원기반 구축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중개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운영

(전기수, 2012:14-15)

다문화 사회의 통합에 가장 주요한 요인은 교육이며, 앞서 언급한 모든 국가들이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란 인종, 민족, 성별, 사회적 지위, 종교, 이념에 따른 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여,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등을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부정확할 때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다문화를 농어촌 지역에 제한되는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주민의 대다수(2011년 63.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정의철, 2012:49-64).

단순히 다양한 나라의 음식, 언어,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 방식으로는 집단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Banks(2008)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편견과 불평등에 대한 개선의지를 강조하고 사회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정의철, 2009:49-64). 양계민(2011:iii)은 다문화라는 일차원적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단일한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해경(2007:241)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주민 정책은 다문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내용은 동화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입안과 수행 과정에서 외국인은 철저하게 배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철(2009:1-10)은 소수집단에 게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동화교육이 아닌, 공존과 공감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다문화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다문화주의적 공존’일 것이다. 호주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다양성을 사회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구체적·실제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소수 문화의 팽창, 주류 집단과의 괴리, 이들의 영향력 행사, 과다·중복 수혜로 인한 역차별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IV. 다문화 무용교육

다문화 무용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무용의 양식이나 요소를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예술의 사회적·문화적 기능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문화 무용교육의 필요성 또한 부각되는 추세이다. 특히 음악이나 미술처럼 특별한 표현 도구를 다루는 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점과,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체적 표현과 물리적 접촉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개인 간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주 언급된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 무용교육을 개발하는 학술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교육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 단편적으로 활용하거나, 교육 제언을 목적으로 제작된 가안에 불과하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실제 운영 중인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논의와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다문화 무용교육은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상의 활동뿐만 아니라, 예술가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 무용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외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무용교육인 것으로 확인되며, 예술 외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이 보다 활성화 되어있다.

EdChange¹²⁾는 공정성, 다양성, 다문화주의, 사회정의 등에 헌신하는 교사의 모임으로 Paul Gorski가 설립하였다. 교사와 학교, 사회의 진보적인 변화에 기여하고자 워크숍, 프로젝트, 커리큘럼 등을 협력 개발한다. 정기적으로 다문화 교육에 관련한 문헌이나 기사, 자료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학교의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예술을 통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SoJust.net 등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

12) EdChange. <http://www.edchange.org/>

다. NAME¹³⁾ 역시 다문화 교육을 통한 정의와 평등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1990년 Association of Teacher Educators(ATE) 회장 Rose Duhon-Sells의 제안에 의해 조직되었다. 1991년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국내회의를 시작으로, 다문화 교육관련 학술연구, 공개토론, 정보공유, 기관협력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Annual NAME Awards를 통해 선진 다문화 교육사례를 발굴·보급하기도 한다.

이 두 기관은 교사연합에 의해 조직, 운영되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학습자, 지역, 환경의 특성을 분석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다문화 교육을 개발하는 강점을 지닌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는데, NAME의 우수 사례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지식부족에 대해 ‘다문화교육사’ 제도 등의 대안이 등장하고 있는데, 교사연합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인식개선과 정보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uston Arts Partners¹⁴⁾는 모든 아이들에게 학문적·사회적·정서적 계발을 돕는 양질의 예술교육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연합이다. 부모와 교사, 아이들이 발견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예술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적인 참여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예술가 협업, 교육지원, 연구지원, 사례공유,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휴스턴 내 20여개의 예술기관, 20여개의 교육청, 3개의 대학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그중 무용교육에 관련한 기관은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Hobb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Young Audiences of Houston; Arts for Learning(YAH), Multicultural Education and Counseling through the Arts(MECA) 등이다.

MECA¹⁵⁾는 휴스턴 예술 파트너로서 문화예술교육, 학술활동, 학교지원,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소외 청소년과 성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휴스턴 최대의 라틴계 커뮤니티 아트센터로서, 양질의 예술교육과 무료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5,000명 이상의 학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예술을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의 학습을 촉진하는 한편, 자기 이해와 존중,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음악, 무용, 시각예술, 창의적 글쓰기, 연극 등이며, 무용은 구체적으로 브라질 민속춤(Capoeira), 멕시코 발레(Folklorico), 클래식 발레, 힙합, 재즈 등을 다룬다.

13) National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NAME) <http://nameorg.org/>

14) Huston Arts Partners. <http://www.houstonartspartners.org/>

15) Multicultural Education and Counseling through the Arts(MECA) <http://meca-houston.org/>

캘리포니아의 Art, Research and Curriculum Association(ARC)¹⁶⁾은 다문화 교육의 우수성과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1977년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민자 학생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에 고도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외된 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학교 혹은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인종관계 개선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봉사(ARC Tutoring), 로스앤젤레스의 지역 청소년을 위한 고등교육(Project Avanzando) 등이다. Pacific Islander Kie Association(PIKA)을 통해 오클랜드에서 예술교육,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호주 다문화 재단¹⁷⁾은 1988년, 건국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설립한 독립단체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국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다각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Multicultural Arts Victoria(MAV)¹⁸⁾ 등의 산하 기관과 협력하여 예술의 다양성 보존과 창작·교육에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Multicultural Arts Professional Development(MAPD)¹⁹⁾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주의적 예술 시장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의 주정부 기관인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DEECD)²⁰⁾에서는 2009-2013년에 걸쳐 다문화 시민 육성을 위한 3개년 전략을 추진하였다. 빅토리아의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4명 중 1명이 해외에서 출생하였으며, 230개국 출신의 시민이 180여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116개의 종교에 따르는 특성이 있다. 이에 주 정부는 인종과 언어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가져올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DEECD는 빅토리아 내 학생들이 성공적인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준비하도록 장려한다. 구체적으로 영어 이외의 언어,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과 지식, 호주의 역사, 국제사회와 경제 등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위원회, 교장,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 통합과 차별 제거를 위한 다문화 법률, 정책, 교육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산하기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다문화 무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확

16) Art, Research and Curriculum Association(ARC). <http://www.arcassociates.org/>

17) Australian Multicultural Foundation. <http://www.amf.net.au/>

18) Multicultural Arts Victoria(MAV). <http://www.multiculturalarts.com.au/#gsc.tab=0>

19) Multicultural Arts Professional Development(MAPD).

http://esvc001299.wic025u.server-web.com/rsch_research_mapd.shtml

20)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DEECD).

<http://www.education.vic.gov.au/Pages/default.aspx>

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용은 연극과 함께 공연예술에 속해 있으나, 수요는 음악, 미술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교육일환의 단발성 축제, 박람회를 살펴보면 방법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둔 민속춤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부의 중앙다문화교육센터²¹⁾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에 비전을 두고 ① 다문화 교육 정책연구 수행 ② 다문화 교육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③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④ 다문화 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⑤ 다문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의 5대 영역에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표 2. 교육부_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 교육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다문화 교육 정책연구 수행	현행 다문화 교육 전달체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어(KSL)교육과정 진단평가: 교육효과, 신뢰도·타당도 검증 등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측정도구 개발 해외주요국 다문화 교육 정책동향 이슈페이퍼 배포: 다문화 교육 법령, 주요 정책사업, 이슈, 우수사례 등의 정보 공유
다문화 교육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 지원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연수, 교육자료 개발 등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지원
다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식제고	일반인 대상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동영상 제작·배포 대학생 멘토를 위한 다문화 e-learning 프로그램 개발 학교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콘텐츠 개발
다문화 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과 출입국사무소를 통한 다문화 가정 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 다문화 전담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해외 주요국 다문화 교육기관 탐방: 시·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
다문화 교육 진흥 및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 교육 방향성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시·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담당자 전문성 및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연수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 보급 다문화 교육 관계자 협의회 운영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²²⁾은 2008년부터 ‘다문화 교육 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여, 아시아 지역 11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107명의 강사(2008-2010년 누적)를 학교와 문화기

21) 중앙다문화교육센터. <http://www.nime.or.kr/Front/main/index.asp>

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

반시설에 파견하고 있다. 2010년에는 10개의 다문화 예술교육사례를 선정하여 개별 기관에 보급하였다. 문화현상의 발견, 문화양식의 확인과 비교, 문화적 합의에 이르는 ‘상호문화교육 4단계’를 기본 구조로 제안하기도 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8-9). 교육부의 언어·문화교육에 비해 예술교육에 초점을 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교육개발 등의 10여개 분야 중 문화다양성 교육 증진 연수, 재외동포 지원사업 기획·운영, 콘텐츠개발연구, 문화다양성교육 심포지엄, 문화다양성 출판지원 등이 다문화교육과 연계되어 있다.

표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다문화 교육관련 사업

구분	사업명	내용
인력양성	문화다양성 교육 증진 연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인식 개선 교육사업
국제교류	재외동포 지원사업 기획·운영	재외동포 3,4세대와 입양가족, 현지학생 및 교사들에게 한국문화의 가치와 정신을 소개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한국문화와 현지문화의 접목을 추구
교육개발	콘텐츠개발연구	다문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콘텐츠 발굴 및 교육 연구 초·중등 학생대상 문화 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매뉴얼 개발 강사 및 기반시설 종사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다양성교육 심포지엄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탐색하고 교육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류의 장/ 세부 실천전략 모색, 성과공유 등
	문화다양성 출판지원	일반 대중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제의 교양서·이론서 발간

경기문화재단은 ‘청소년의 문화 다양성 이해와 수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다. 이는 국내거주 이주민이 자국의 문화를 경기도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²³⁾. 그 외에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 행사를 지원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각국의 문화향유를 도모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은 다문화 교육 대상에 내국인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에서 선택한 문화 정책의 담론을 모든 시민이 인식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언어 중심의 동화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용은 비언어

23) 경기문화재단(2010년 11월 18일). “다문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고.
http://www.ggcf.or.kr/html/notice/notice_support.asp?not_idx=24246&flag=READ&page=8&s_gubun=&s_area=&s_key=&s_value=&s_year=&s_month=&s_id=&s_order=

적 표현을 유도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에도 소통의 한계를 극복할 여지가 있다. 다만 여러 나라의 문화를 단순 체험하는 식의 교육 내용에서 발전하여, 언어·인종·문화·사회·경제적으로 구분되는 집단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교육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전국 16개 시·도의 이주민 관련기관과 문화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개 응답 기관 중에서 161개 기관(80.1%)이 최근 5년 간 다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미 운영 원인으로서는 업무량 과다, 예산확보의 어려움, 관련 콘텐츠 부족, 참여대상 동원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개별 지역의 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무용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소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환경과 대상의 특수성, 참여자의 수요를 정교하게 파악하여 최적의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4. 기관 및 도시규모별 대표 프로그램 분야(%)(전경옥, 2012:82)

구분		사례(수)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상	대중예술	축제	기타	
전체		161	24.8	11.2	8.1	5.0	8.7	0.6	5.0	11.2	25.5	
기관 유형	문화기반 시설	도서관	61	55.7	3.3	6.6	0.0	9.8	0.0	1.6	4.9	18.0
		박물관	22	0.0	0.0	27.3	0.0	4.5	0.0	0.0	9.1	59.1
		문화회관	3	0.0	33.3	33.3	0.0	0.0	0.0	0.0	33.3	0.0
		문화원	15	6.7	6.7	0.0	0.0	13.3	0.0	13.3	6.7	53.3
		문화의집	3	0.0	0.0	0.0	0.0	33.3	0.0	33.3	0.0	33.3
		소계	104	33.7	3.8	10.6	0.0	9.6	0.0	3.8	6.7	31.7
	이주민 기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3	9.4	26.4	3.8	15.1	7.5	1.9	7.5	17.0	11.3
		외국인력 지원센터 외	4	0.0	0.0	0.0	0.0	0.0	0.0	0.0	50.0	50.0
		소계	57	8.8	24.6	3.5	14.0	7.0	1.8	7.0	19.3	14.0
도시 규모	대도시	104	26.0	10.6	8.7	2.9	10.6	0.0	4.8	10.6	24.0	
	중소도시	57	22.8	12.3	7.0	8.8	5.3	1.8	5.3	12.3	24.6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주민을, 도서관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박물관은 다문화 가족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전경옥, 2012: x). 다문화가

족의 구성원은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출신국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데 이들을 단일한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다만 1인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화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하여 수혜와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 기관의 협력과 정보 교류, 특성화 전략 개발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위법에 대한 법적 지원’이라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의 수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유엔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최소의 교육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치안유지와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무용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개별 기관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이민국에 대한 적응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2,750개 중 문화동화 54.4%, 한국문화체험 16.1%, 상호문화이해 14.4%, 한국인 대상 문화체험 5.4%, 이주자 모국향수 2.1%, 기타 7.5%)(전경옥, 2012: iv). 정책적으로는 문화 공존과 타문화 이해, 문화 다양성 등을 표명하고 있지만, 내국인 혹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문학(24.8%)이나 음악(11.2%)에 비해 무용교육의 사례(5.0%)는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다문화 교육에서의 무용을 특정 장르가 아닌 교육원리 혹은 방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움직임을 활용한 친밀감 형성과 비언어적 소통은 무용이 이루어 낼 수 있는 독특한 교육 효과이며, 이는 문학, 미술 등의 특정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V. 결론

다문화주의는 단순하면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갖는다.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포괄적인 사회를 창조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정인형, 2012:11). Banks(2008:135-137)는 다문화 교육이 한 사회의 현상 유지가 아닌 타 문화 이해를 위한 공감능력·표현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떤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교육 패러다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을 제안하였다.

무용은 신체 언어를 통해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예술이며,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 없이 다름과 새로움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다양한 지역 출신

의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기존의 편견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다문화 사회의 시민형성과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 철학적인 면에서 다문화 무용교육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소수 집단에게 그들이 속한 사회를 이해·수용하도록 요구하는 동화주의는 국가의 체제 유지에 필수적이며, 개인의 주체적·상호적 문화 교류를 권장하는 다문화주의는 인권보장에 효과적이다. 한국은 2013년 기준 전 국민의 2.8%가 이주민으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로서, 정책 사업에서는 다문화주의적인 목표를 추구는 데 비해, 실제 운영에서는 다소 동화주의적인 요소가 확인되었다.

교육 내용과 방법 면에서 다문화 가족 외 교육자, 실무자, 일반인을 포함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대상과 그들이 접한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 교육, 행정 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 효과와 강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우수 사례를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육 정책적인 면에서 다문화 무용교육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최소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의 정책 연구는 문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잉·중복 수혜를 분산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더 나아가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는 단발성 행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불안과 이주민 증가, 외국인 차별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 외에도 비정부기관, 비영리기관, 후원, 기부, 봉사 등의 사회 활동을 통해,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 관용주의, 동화주의, 공화주의 등의 이념 사이에서,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논리적 근거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민족성, 지리적 특성,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며 정답이 없다. 주로 당대의 사건이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 사례의 성공·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예상 가능한 갈등·문제에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자들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 사회를 ‘다문화적 시민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적 연대라는 시민사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 수용과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이다(정인형, 2010:11). 이를 위해 다문화 교육의 문제를 국가적·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소수집단을 포함한 전 시민의 합의와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인종차별, 소외, 폭동 등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고, 동

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다문화 정책 비판 및 포기선언을 시점으로, 국내외 다문화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 철학·교육 과정·교육 정책적인 면에서 추진해야 할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비단 다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가 지향해야 할 무용교육의 비전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고경희(2011), “다문화적 상호이해를 위한 무용교육 제고: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제29집 제3호**, 203-228.
- 권경희(2012), “유럽 다문화주의의 위기: 변화과정과 원인”, **유럽연구 제30집 제2호**, 83-119.
- 김영미(2011), “테러학교 된 이슬람 교육기관 ‘마드라사’ 폭탄배낭 메는 영국·미국의 엘리트 청년들”, **동아일보 매거진 11월 626호**, 212-227.
- 김인숙, 이경희(2011), “무용/동작 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제7집 제4호**, 57-73.
- 김현남(2012), “대안적 다문화 무용교육의 가능성 고찰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0집 제4호**, 47-54.
- 나경아, 박현정, 오유진(2011),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의 무용교육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제21집**, 17-34.
- 나경아, 오유진, 박현정(2012),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24집**, 19-35.
- 박재영(2008),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유럽다문화연구 제1집**, 107-138.
- 박성혁, 곽한영(2009),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방향 모색”, **시민교육연구 제41집 제2호**, 97-127.
- 설동훈(2006),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손재현, 김한아, 이성노(2012), “무용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성 발달”, **우리춤연구 제18집**, 88-106.
- 안병주, 원은정(2009), “다문화시대에 따른 무용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7집 제1호**, 69-80.
- 양계민(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주연, 이강순(2010), “창작무용학습을 통한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사회성 변화”,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1집 제1호**, 25-46.
- 이산호(2008), “프랑스의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정책”, **다문화연구 제5집**, 7-25.
- 이정연(2008), “다문화 사회 속의 초등무용교육 변화를 위한 모색: 포크댄스(Folk Dance)를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6집 제3호**, 181-192.
- 이혜경(2007), “이민 정책과 다문화주의: 정부의 다문화 정책 평가”,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용역과제 07-7**, 219-250.

- 장봉익(2012), “유럽 다문화주의 연구: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집 제4호**, 131-154.
- 전경옥(2012),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전기수(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사업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 전은자, 김현정(2010), “무용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제31집**, 103-136.
- 정은영, 최현주(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춤 교육방안”,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8집 제4호**, 199-217.
- 정의철(2012),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인형(2012), “프랑스와 한국의 다문화 수용실태 조사와 사회통합의 방향”,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 정희자(2009), “다문화 체험을 위한 무용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제26집**, 197-219.
- 최윤영(2010),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무용교육의 적용 방안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63집**, 261-282.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2010 다문화 교육 콘텐츠 사례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Banks, J. A.(2008), *An Introduction Multicultural Education*, Pearson Education, Inc.
- Castles, S. and Miller, M. J.(1998),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2nd ed), London: Macmillan.
- Martiniello, M.(1997), 윤진(역, 2008),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
- Troper, H.(1999), “Multiculturalism”, In Magocsci, P. R.(Ed.),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997-1006,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